12대 국정과제

외교 · 통일 · 국방

한반도 평화체제 구축

정치 · 행정

부패없는 사회 봉사하는 행정

지방분권과 국가균형 발전

참여와 통합의 정치개혁

경제

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

동북아 경제 중심국가 건설

과학기술 중심사회 구축

미래를 열어 가는 농어촌

사회 · 문화 · 여성

참여복지와 삶의 질 향상

국민통합과 양성평등의 구현

교육개혁과 지식문화 강국 실현

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구축

한반도 평화체제 구축

1. 기본 구상

개념

-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란 지난 50여년간 한반도 질서를 규정해 온 정전상태가 평화상태로 전환되고, 안보 · 남북관계 · 대외관계에서 이를 보장하는 제도적 발전이 이루어진 상태임
  - 불안정한 정전상태 종식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고, 이를 통해 동북아 중심국가 토대 마련

필요성

- 탈냉전의 세계사적 흐름과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민족적 요구에 부응
- 안보위협 해소와 전쟁방지를 통한 항구적 평화 실현
- 평화정착을 토대로 민족공동체 형성의 기반 마련
-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 건설의 여건 조성

추진방향

- 남북 당사자 해결원칙과 국제사회의 협력 확보
- 남북간 '포괄적 협력'과 실용주의 외교 병행
- 평화체제에 대한 실질적 보장과 제도적 보장 병행 추진
- 정예강군 육성을 통해 평화체제의 군사적 보장 확보
- 평화증진에 따라 한 · 미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 추구
- 국민적 합의와 지지를 토대로 추진

단계별 추진전략

1단계 : 북한 핵문제의 해결과 평화 증진 가속화

·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전기 마련(현안 핵심과제)

· 남북 화해협력 지속 및 남북 군사회담 정례화
· 남북정상회담 등을 통한 평화정착의 토대 마련
· 외교역량 강화를 토대로 동북아 평화협력의 분위기 조성
· 북한 핵 · 미사일 문제의 해결 합의

↓

2단계 : 남북 협력 심화와 평화체제 토대 마련

· 북한 핵 · 미사일 해결 합의사항의 구체적 이행
· 남북 실질협력 심화 및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의 추진
· 동북아 평화협력체 구상의 제안 및 추진

↓

3단계 : 남북 평화협정 체결과 평화체제 구축

· 남북 평화협정 체결 및 국제적 보장 확보
· 평화체제 전환에 따른 제반 조치사항 추진
· 남북 경제공동체 본격 추진 및 운용적 군비통제의 단계적 추진
· 동북아 평화협력체 구축 실현

2. 추진과제

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평화의 제도화

남북대화의 정례화

- 남북정상회담 등 각종 남북회담의 정례화 · 제도화 추진
  - '남북정상회담 – 장관급회담 – 분야별 실무회담' 을 축으로 남북간 모든 현안을 대화로 해결하고 평화와 협력관계를 발전
- 상호 신뢰우선의 원칙에 따라 남북간에 합의된 사항은 반드시 이행, 실천되는 관행을 정착시켜 남북간 신뢰를 증진

남북 교류협력 심화 · 발전

- 남북 경협사업의 확대 · 발전을 통해 경제공동체 토대 마련
  - 민간 · 정부간 상호 보완적 역할 분담하에 추진
- 사회 · 문화 교류협력 확대를 통해 민족 동질성 회복 촉진

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국민적 합의 형성

- 새 정부 대북정책 및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국민들의 올바른 인식 형성 및 참여 확대
- 주요 사안 국회 사전 협의 등 정치권과의 초당적 협력 추진

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

- 여타 분야의 남북관계 개선과 병행하여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 조치를 단계적으로 추진
- 남북협력 심화,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으로 한반도 평화가 실질적으로 보장된 이후 제도적 장치 마련

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국제환경 조성

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추진

- 북한의 핵 · 미사일 포기 등 대량살상무기(WMD) 문제의 포괄적이고 완전한 해결 추진(북핵 해결 3원칙 견지)
  - 북한 핵문제가 남북간 신뢰증진과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유도
- 우리의 주도적 역할과 함께 한 · 미 · 일 공조, 중 · 러 · EU의 협조 확보 등 국제사회와의 공조 강화

한반도 평화증진을 위한 환경 조성

- 남북관계 증진과 긴장완화를 통해 실질적 평화를 구현하고, 이를 제도화할 수 있는 국제환경을 조성
  - 한 · 미 관계 재정립 및 북 · 미/북 · 일 관계 정상화 지원
- 남북이 당사자로서 평화협정을 체결하고, 유관국이 이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, 정전협정을 대체
  - 평화협정 체결 협의를 위한 남북 및 유관국간 회담 추진

동북아 평화협력체 창설 추진

- 동북아 평화 · 안보문제의 포괄적 협의를 위해 남 · 북한, 미 · 일 · 중 · 러가 참여하는 다자협의체 구성 추진
- 역내 정치 · 안보 환경을 개선하여 한반도 평화정착 및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 건설에 기여

확고한 평화보장을 위한 국방태세 확립

자주적 방위역량의 조기 확충

- 한국적 여건에 맞는 '21세기형 첨단 정보군 · 기술군' 육성 추진
- 군 구조 개선
  - 미래전 수행에 적합한 기술집약형 군 구조로 발전
  - 통합전력 발휘를 위한 3군 균형 발전
- 전력 증강
  - 북한 · 불특정 위협 및 비군사적 위협 동시대비전력 우선 보강
  - 정보 · 정밀타격 분야 긴요전력 중점 확보
  - 연구개발 투자 확대를 통해 무기체계 독자개발능력 확충

한 · 미 동맹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

- 미래 한 · 미 동맹 및 주한미군의 역할에 대해 공동 협의
- 한반도 안보상황 변화 및 평화체제 구축과 연계, 발전적 조정
- 한 · 미간 충분한 협의를 통해 확고한 공감대 형성하에 추진

남북 군사적 신뢰구축 추진

- 남북 군사관계 진전을 위한 여건 조성
  - 국방장관회담 등 군사당국자 회담 정례화
  - 남북 교류협력사업의 군사적 지원 보장
- 점진적 · 단계적으로 군사적 신뢰구축 추진
  - 이행이 용이한 조치부터 우선 합의 · 추진
  - 남북관계 진전 정도에 따라 군사교류 점차 확대

부패없는 사회 봉사하는 행정

1. 부정부패 척결

- 청와대 내 권력형 비리, 고위공직자 비리 상시적 감시 및 예방 전담반 운영
- 국민적 의혹사건 및 권력형 비리와 고위공직자 비리를 처리할 한시적 상설특검제 실시
- 신뢰받는 사정기관으로 거듭나도록 과감한 검찰개혁
  - 검찰인사위원회를 심의기구화하여 검찰인사의 정치적 중립성 · 공정성을 담보
  - 검사의 소신있는 결정을 위하여 검사동일체 원칙 개선
  - 불기소 사건에 대한 재정신청 범위 확대
  - 일부 민생치안 범죄에 한해 검찰의 사법적 통제를 받는 전제하에서 경찰수사의 독자성 인정
- 범정부 차원에서 강력한 '반부패 시스템' 구축
  - 감사원 · 법무부 · 행정자치부 · 부패방지위원회 · 검찰 · 경찰 등으로 권력형 비리 척결을 위한 범정부 대책기구 구성

- 감사원 : 공직분야 감찰, 내부 통제시스템 구축
- 행정자치부 :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제도 내실화
- 부패방지위원회 : 반부패 정책 수립 · 평가, 신고 처리
- 검찰 : 권력형 비리 등 부정부패 사범 수사 및 지휘 총괄
- 경찰 : 서민생활과 직결된 관행적 비리 수사 및 전담반 운영

• 시민옴부즈맨 도입 등 부패추방을 위한 시민참여 확대
• 내부 신고자의 신분보장, 신고자 면책 및 보상금 지급 확대

2.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시스템 확립

• 부처에게 채용 · 승진 · 보직 · 훈련 등 주요 인사정책에 관한 보다 광범위한 자율 부여
• 분산되어 있는 인사기능의 통합문제 검토
• 공기업, 정부산하단체에 관한 바람직한 인사시스템 구축
• 인사편중을 시정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 마련
• 여성 · 기술직 · 장애인 · 지방출신 등 균형적인 인력활용제도 구축
• 계급제하에서의 승진위주 인사관리, 연공서열에서 탈피한 전문성을 강화하는 성과중심의 인사시스템 구축
• 공직에 대한 충원방법 다양화와 개방형 임용제도의 개선
• 정계 · 관계 · 학계 · 민간을 포괄하는 폭넓은 인재풀 구성

3. 국민과 성과중심의 행정개혁 추진

• 인사와 예산에 관한 자율을 단계적으로 확대
• 책임운영기관제도의 청 단위 기관 혹은 부처 수준으로 상향 적용
• 감사원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검토
• 성과평가에 기초한 적절하고 생산적인 유인체계 구축
• 책임운영기관제도, 성과관리제도, 성과주의 예산제도, 성과급, 목표관리를 유기적으로 결합한 하나의 체계 구축
• 행정정보 공개의 강화
• 효율성과 민주성이 조화되는 정부조직 개편 추구

4. 투명한 성과중심의 예산개혁

• 정부의 자산 · 부채 등을 투명하게 파악할 수 있는 통합 재무관리 시스템 구축
• 성과관리를 토대로 각 부처의 특성과 환경에 부합하는 성과주의 예산제도 구축
• 국가의 비전과 전략에 부합하는 예산 편성
• 국민 의사를 반영하는 예산 편성
• 지방자치단체와 각 기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균형적 · 상향적 재정운영제도 구축

5. 국민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시스템 구축

• 총체적 재난관리 시스템 구축
• 재난관리 조직의 위상과 기능 강화
• 재난유발 위험시설 등에 대한 관리실명제 실시
• 자연재해 보험제도의 도입 검토
• 범죄의 지능화 · 첨단화 · 과학화 등의 추세에 따른 치안행정의 과학화와 전문화 추구

지방분권과 국가균형 발전

1. 지방분권의 획기적 추진

- 중앙의 기능과 권한의 획기적인 지방이양 추진
  - 중앙정부 기능을 제외하고는 지방업무로 규정, 「지방이양일괄법」 제정을 통한 대대적 기능이양 추진
  -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과감한 통 · 폐합 추진
  - 합리적인 자치경찰제 도입 추진
- 지방의 자치역량 강화
  - 자치입법 · 조직 · 인사권 등 잔존하는 사전규제적 기능 전면 재검토, 대폭 이양
  - 지방 전략기획 기능 강화를 위한 교육 · 훈련 및 인적자원 교류 촉진
  - 주민투표제, 주민소환제 도입으로 주민 직접참정권 확대
- 지방재정의 확충과 건전성 확보
  - 지역혁신 네트워크와 재정지원 체제의 연계 강화로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보(사전심사 → 포괄지원 → 평가)
  - 지방의 재정력 확충과 불균형 완화를 위해 지방소비세 신설, 국세와 지방세간 세목 교환, 차등보조율 적용 검토
  - 지방의 재정확충 노력과 연계된 지원 및 평가체제 확립
  - 지방재정 분석 및 재정 진단체제 강화
- 기타 대통령 주재 시 · 도 지사회의 정례화, 지방 4단체 기능 강화 등 지방 의견 수렴 및 환류체제 구축과 지역별 광역행정협의 기능 강화 등 자치단체간 협력체제 강화

2. 국가균형 및 지역별 특성화 발전

- 산 · 학 · 연 · 관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지역혁신 시스템(RIS) 구축
  - 5년 단위의 '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'을 수립하여 지역전략산업, 지방대학 · 연구소, 기업지원기관을 네트워킹하는 산업집적 지도 작성
  - 지역개발기구(RDA)를 설립하여 지역사업 발굴, 혁신주체간 네트워킹 촉진, 중앙예산 지원창구의 일원화 등 클러스터(Cluster) 형성의 핵심주체 역할 수행
- '선택과 집중'에 의한 지역특화산업의 육성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
  - 4개 지역 진흥사업(대구 · 광주 · 부산 · 경남)은 2004년부터 2단계 사업을 추진하고, 9개 시 · 도 사업(2002~2006)도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점진적으로 확대 추진
  - 소지역 특성을 감안한 지연(地緣)산업 발전기반 조성
    ※ '산지표시' 등 지적재산권 보호, 재정자립도 30% 미만 지역의 지연산업에 기술개발 등 지원
- 지역 특성별로 산업 거점도시를 특화하고 낙후지역의 성장 인프라 확대
  - 낙후지역 이전 기업 등에 '국가균형 발전 보조금' 차등 지급
- 전략산업 중심으로 물류체계를 개선하고, 지방 중소 유통업의 발전 지원

3. 지방대학 및 지방문화 육성

• 권역별 대학특성화 사업 추진
- 대학의 특성화 분야를 지역의 대표 브랜드로 육성
- 산업체 · 대학 · 연구소 · 지자체 등 지역의 주체들이 협력
- 지역특화 산업 등과 연계하는 등 지역발전의 핵심역량으로 집중 육성

• 지방대학 육성기반 조성
- 테크노파크(TP), 소규모 기술혁신센터(RRC, TIC, SRC, ERC) 등 각 부처 지역기술혁신 사업을 확충하고, 지방대학과 연계 강화
- 지방대학을 지역 R&D의 핵심주체로 육성하기 위하여 정부 R&D 예산의 지방대 지원비율 제고 : 8.5%(2001) → 20%(2007)
- 국비장학금, 해외연수 지원, 첨단 시설 · 기자재 및 기숙사 확충 등 우수인재의 유치 여건 조성

• 지방문화 육성
- '우리 문화 · 역사마을 만들기' 사업을 통한 문화적 정체성 확립
- 지역문화축제 지원 및 도서관 · 박물관 등 문화 인프라 구축
- 출판, 애니메이션, 게임 등 고부가가치 문화산업을 중심으로 지역별로 특화된 문화산업단지 조성 확대
- 지역언론 지원, 지역매체 개발 및 발전 지원

4. 신행정수도 건설

• 서울 1극 집중의 폐해를 극복하고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을 유도하기 위하여 충청권에 신행정수도를 건설
- 정치 · 행정의 중심지로 조성하되, 일부 첨단산업과 교육 · 연구 기능을 구비한 자족도시로 건설
- 저밀도의 쾌적한 생태 · 정보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적정한 개발규모를 설정(약 1,500만평 규모)
  ※ 공공부문 총투자 소요는 7조원 내외로 추정
- 정치 · 경제 ·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새로운 활력을 창출하는 계기가 되도록 국제공모를 통해 최고수준의 도시 설계

•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전담조직을 발족시켜 본격 추진
- (가칭)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와 추진기획단 구성
- 광범위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추진하되,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하여 특별법 제정을 추진
- 강력한 부동산 투기 및 난개발 방지대책을 병행
  ※ 충청권 11개 시 · 군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(2003. 2.17)

잠정 추진일정

• 2003년 : 추진조직 정비, 국민적 공감대 형성, 특별법 제정 등
• 2004년 : 예정지 지정
• 2005~2006년 : 설계 및 보상
• 2007년 : 선도부처 이전을 위한 부지조성공사 착공

참여와 통합의 정치개혁

1. 정치개혁의 기본방향

국민참여 : 참여, 자율, 분권

- 참여(participation) : 국민은 자신들의 미래를 설계하는 공적, 집단적 의사 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능동적으로 개입
- 자율(autonomy) : 공적 영역에서 자유로운 심의와 토론에 들어가기 이전에 시민의 자율적인 사적 영역 확보
- 분권(decentralization) : 권력의 집중과 독점은 시민의 정치참여 공간을 제한.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공적 영역(public sphere)을 확대하기 위한 권력의 분권과 분산

국민통합

- 포용(inclusiveness) : 이념 · 이익 · 정체성이 다르다는 것을 관용하고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서로를 받아들이고 민주적 의사결정에 동참.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소외와 배제, 특권과 차별은 철폐되어야 하며, 이념 · 이익 · 정체성 · 가치를 이유로 민주적 과정에의 참가와 접근이 봉쇄되어서는 안됨
- 균형 : 소수파와 사회적 약자가 안고 있는 '경쟁 출발지점에서의 불평등'을 해소해야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고, 사회적 정의가 실현됨. 사회적 불균형은 갈등을 유발하고 공동체의 분열을 초래함
- 대화와 타협 : 대화 · 토론 · 심의를 통하여 상호 설득 · 교정 · 타협으로 합의된 공공의사의 형성은 국민통합을 촉진

민주적 책임성(democratic accountability)

- 수직적 책임성 : 민주적 경쟁을 통해 선출된 대표는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을 따라야 하고 국민의 위임에 충실해야 함. 만약 이를 위반했을 때 국민은 대표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함
- 수평적 책임성 : 대표들간의 상호 견제와 감시를 통해 탈법 · 불법 · 태만행위를 제재하고 주권자의 이익에 봉사하도록 강제되어야 함

투명성(transparency)

- 민주적 제도와 경쟁의 과정이 투명해야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고 대표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음
- 민주적 제도와 과정의 투명성은 대표와 시민, 시민과 시민 사이, 민주적 제도와 과정 자체에 대한 신뢰를 형성시킴

2. 정치개혁 5대 목표

국민참여정치

- 개방형 정치
  - 특정 정치인과 계보가 독점해 왔던 폐쇄형 정치를 국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 정치로 전환

• 국민참여형 정당정치
- 국민은 정당의 당원 또는 지지자로서 그 정당의 당직 · 공직 선출 및 정책결정에 참여
- 국민의 정당 참여와 당내 민주주의를 보장할 수 있는 정당 구조와 시스템 마련
• 신진 정치인의 진입장벽 제거
- 기성 정치인에 비해 여러 차원에서 차별을 받고 있는 신진 정치인의 정치 진입을 용이케 하기 위한 제반 장벽을 제거

국민통합정치

• 국민통합
- 압축적 근대화 과정에서 심화되었던 남북, 중앙-지방, 노사간 분열 해소
- 여성, 노약자,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
• 지역통합
- 분열적 지역주의를 완화하기 위해 현행 소선거구 단순다수대표제 형태의 선거구제를 개편

투명한 청정정치

• '고비용 정치', '부패정치' 그리고 '책임 부재의 정치'에서 벗어나기 위해 투명한 청정정치 실현
• 정치자금 및 관련 선거제도 개혁
- 정치(정책 · 정치자금)실명제 추진
- 선거공영제 확대를 통한 투명성 강화
- 정치부패 예방과 척결을 위한 법 · 제도적 대책 강화

수평적 협력정치

• 청와대를 정점으로 하는 수직적 · 위계적 국정운영에서 국회, 정당, 시민사회 등이 대통령과의 수평적 관계 속에서 국정운영에 함께 참여하고 협력하는 '협력정치(協治)' 관계 정립

디지털정치

• 디지털정치를 통한 국민참여 및 정치 투명성 확보
- 'e-정치' 활성화를 위한 법 · 제도 개선
- 정치자금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인터넷 정치헌금제 도입

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

1.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

• 기업환경 · 체질 개선을 위해 추진된 기존 정책은 규제완화, 구조조정, 지원제도 정비로 범주화됨. 규제완화와 구조조정은 일부 성과가 있었으나 지원제도의 성과는 매우 미흡

추진과제

• 규제 전반에 대해 규제일몰제 적용여부 검토
• 규제개혁위원회의 활동을 강화하여 규제에 대한 심사를 개선
• 토지공급을 확대하되 '선(先)계획-후(後)개발 체제' 확립
• 수도권 정책을 '집중억제에서 계획적 관리'로의 단계적 전환에 대한 신중검토
• 환경친화적인 기업에 대해서는 배출부담금 감면, 각종 보고 · 검사 의무의 면제 등 인센티브 제공
• 서비스 산업의 경쟁촉진과 차별지원 개선
• 중소 · 벤처기업 지원제도 정비와 지원의 실효성 제고
• 지방대학의 특성화와 지역별 산업 클러스터(Cluster) 육성

2. 투명하고 공정한 경제 시스템 구축

• '5+3' 과제와 공정거래 정책의 추진으로 많은 개혁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시장이 신뢰하는 '투명하고 공정한 경제 시스템'의 정착과는 아직 상당한 거리가 있음
• 주요 정책과제는 산업자본의 금융지배에 따른 폐해 차단, 대기업 집단의 소유 · 지배구조 왜곡 시정, 경쟁적 시장환경 조성, 소비자 권익의 실질적 확보 등임

추진과제

• 금융회사 계열분리 청구제 도입 추진
• 금융회사 보유 자기계열사 주식의 의결권 행사 제한 추진
• 출자총액 제한제도,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 금지제도 유지
• 기업집단 소유 · 지배구조 공개
• 경쟁제한규제를 일괄적으로 개선하고, 2차 카르텔 일괄정리법 제정 추진
• 공정거래법상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활성화
• 소액다수 서민층 소비자를 위해 공익소송제 도입 검토
• 공정거래위원회 일부 직원의 사법경찰관 지정방안 검토
•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제도 보완

3. 선진적 금융인프라 구축

- 경제위기 이후 신속 · 과감한 금융구조 개혁을 추진, 금융시장 안정, 대외신인도 제고, 금융 중개기능 정상화
- 그러나 아직 부실 금융회사의 처리가 완결되지 않아 금융시장 불안요인이 되고 있으며, 우리나라 금융회사의 국제경쟁력이 미흡하고 금융시장의 신뢰도 높지 않은 실정임
- 주요 정책과제는 회계제도 개선을 통한 시장왜곡 시정, 증권시장의 규율 제고, 구조조정 완결 및 상시 구조조정체제 정착, 중산 · 서민층 및 중소기업 금융이용자 지원 강화, 금융감독 규율의 확립 등임

추진과제

- 금융회사의 대주주 및 주요 출자자 자격요건제도 강화
- 대주주 및 계열사에 대한 대출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
- 대주주 및 계열사에 대한 금융감독 및 검사 강화
- 대주주 및 계열사와의 거래내역 공시 및 이사회 의결 의무화 확대
- 비상장 금융회사에 대한 금융감독 강화
- 증권 관련 집단소송제 조기 도입
- 증권시장의 불공정 거래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부실 상장기업에 대해 강화된 퇴출기준 엄격 적용
- 상장 · 등록기업의 회계제도 및 공시제도 개선
- 공적자금 투입은행 민영화는 명확한 정책목표를 설정하고, 투명한 절차에 따라 추진하여 부작용을 최소화
- 가계대출 연착륙 유도, 개인 워크아웃 제도 활성화
- 우체국 금융제도의 개편을 통해 금융자금 흐름을 효율화하고 민간 금융회사와의 공정경쟁 유도
- 증권시장과 선물시장간 연계운영을 강화하고, 중복 · 분산된 기능을 합리적으로 개편 추진
- 한국은행 독립성 제고, 물가관리 목표를 연간목표에서 중기목표로 전환
- 다원화되어 있는 현행 금융감독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

4. 재정 · 세제 개혁

- 그동안 재정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재정 · 세제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나, 아직 재정운영 전반에 걸쳐 비효율성과 낭비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임
- 또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였으나 재정운용에서 극복해야 할 근본적인 문제 상존
- 주요 정책과제는 재정구조 및 운영 시스템 혁신, 재정건전화 노력의 지속적 강화, 공정 · 투명한 세제 · 세정 확립 등임

추진과제

-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대한 부처의 자율과 책임 확대
- 예 · 결산 과목구조를 개편하여 단위사업별로 관리 강화
- 위법한 재정집행에 대한 국민소송제도 도입
- 최저가 낙찰제 단계적 확대
- 중기재정계획의 수립 의무화
- 기금 · 특별회계 정비
- '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' 신설, 지역개발 사업간 연계 강화
- 국가채무 관리를 위한 법적 · 제도적 장치 마련
- 공적연금체계 개선, 자산운용의 효율성 제고

• 비과세 · 감면 개선, 관세경감제도 정비
• 상속세 · 증여세법에 완전포괄주의 규정 신설
• '현금영수증 카드제도(가칭)' 시행
• 재산세 · 종합토지세 과표 현실화

동북아 경제 중심국가 건설

1. 동북아 시대의 비전

• 세계 경제 중심지로서 동북아 시대 도래
- 동북아 시대는 경제적 측면을 초월, 변방의 역사를 극복하고 자주적 역사를 창출하는 계기
- 아시아의 번영과 통합의 질서를 구축, EU와 같은 지역통합과 지역공존의 질서로 발전
• 확고한 경제중심 역할과 함께 남북관계 개선이 동북아 시대 개척의 선결과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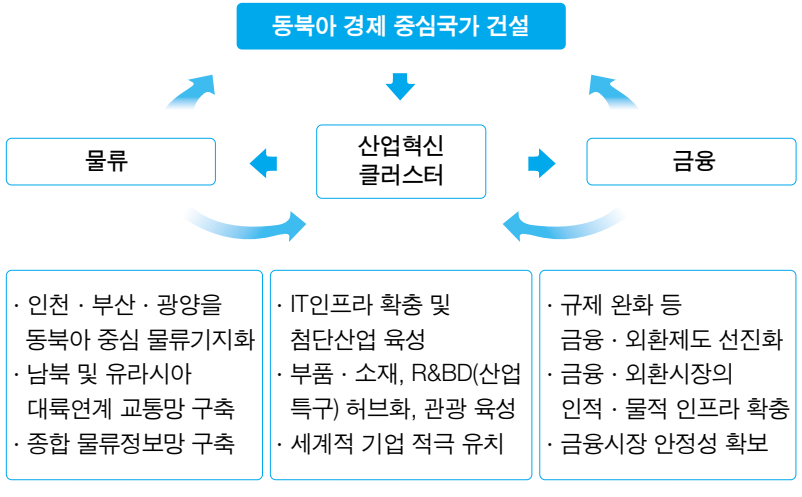
2. 추진방향

• 경쟁과 협조
- 동북아 경제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모든 나라에게 이익이 되는 상호 윈 - 윈(Win-Win)의 협조적 관계로 발전
- 동북아 네트워크 내에서 비교우위에 입각한 선의의 경쟁으로 효율적

국제분업구조 형성

-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
  - IT 등 첨단산업, 물류 · 금융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의 복합발전 추구
- 국토 균형발전과 활력 도모
  - 장기적으로는 비즈니스 거점 개발지역과 각 지방의 기존 산업 클러스터와의 연계를 통해 국토의 균형발전 도모
- 적절한 환경관리로 지속 가능한 발전모델 창출
  - 수도권 산업을 친환경적 구조로 전환
- 남북 경제 교류협력 촉진 및 우호적 외교환경 조성
  -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 건설을 위한 대외기반 조성

동북아 경제 중심국가 건설 추진체계



3. 주요 추진과제

국토의 균형발전과 산업발전 전략 병행

- 인천지역은 물류와 IT 등 첨단연구개발 집적지, 관광단지로 조성 → 남쪽으로는 기흥 · 남양만, 북쪽으로는 개성공단과 연결 ⇒ 수도권 비즈니스 집적지로 발전
- 부산지역은 물류와 부품소재 집적지로 조성 → 북쪽은 울산, 서쪽은 사천과 연결 ⇒ 동남권 비즈니스 집적지로 발전
- 광양지역은 물류와 신소재 집적지로 조성 → 동쪽은 사천, 북서쪽은 광주와 연결 ⇒ 서남권 비즈니스 집적지로 발전

경제자유구역의 조성 및 금융 국제화

- 경제자유구역을 동북아 비즈니스 거점지역으로 개발
  - 경제적 인센티브와 함께 네트워크 외부성의 제공을 통해 추진
  - 기업 경영 및 생활환경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개선
- 금융 · 외환시장을 21세기 동북아 국제금융의 중추로 육성
  - 2007년까지 OECD 수준으로 금융 관련 제도 선진화
  - 인적 · 물적 인프라 확충 및 '금융센터준비위원회' 설치
  - 주요국과의 국제 금융협력을 강화하여 시장의 안정성 유지

동북아 물류 중심기지 구축

- 인천공항 · 부산항 · 광양항을 동북아 중심공항과 항만으로 개발
  - 화물 터미널 및 활주로 확장, 제2연육교와 공항철도 확충 등 인천공항 2단계 사업을 2008년까지 완료
  - 부산신항과 광양항에 2011년까지 컨테이너 부두 63선석과 161만평의 국제 물류단지를 개발하고 항만공사제 도입

• 인천항을 인천공항과 함께 수도권 핵심 물류거점으로 개발
• 경의선 · 동해선 연결 및 대륙철도(TSR, TCR) 교통망 구축
• 2015년까지 공항 · 항만 등을 연결하는 종합 물류정보망 구축

IT 등 첨단산업 · 비즈니스 허브화

• 동북아 IT 중심국가 실현
 - 세계 최고의 정보통신 네트워크(20Mbps) 구축
 - 동북아 IT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세계 표준을 선도
• 동북아 첨단산업 기지로서의 내부역량 강화
 - 인천-수원간 첨단산업 벨트를 R&BD(기술개발 및 사업화) 기지화
 - 부산-경남 가야벨리를 동북아의 부품 · 소재 공급기지로 육성
 - e-Biz · 기업물류 등 지식기반 서비스 산업의 균형발전 추진
•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하여 다국적 기업의 동북아 거점화
 - 정부 차원의 '외국인투자자문위원회(FIAC)' 신설
 - 외국인투자 대행 등을 위한 One-Stop 서비스체제 강화
• 동북아 경제협력체 형성
 - 한 · 중 · 일 FTA 체결 및 동아시아 전자무역 공동체 형성
 - 동북아 에너지 안정공급체제 강화를 위한 '에너지협력체' 구축
• 관광을 전략산업으로 육성, 아시아의 관광 중심국으로 도약
 - 용유도 · 무의도 · 제주도를 아시아 대표 관광지로 육성

남북 경제 교류협력 촉진 및 대외 환경 조성

• 경협거점 개발 및 남북간 산업 · 물류 · 정보통신 축 형성
• 4개 경협 합의서 발효 등 남북간 제도적 인프라 확충
• 동북아 평화협력체 창설 추진
• 한상(韓商) 네트워크 등 분야별 재외동포 네트워크 구축 추진

과학기술 중심사회 구축

1. 기본방향

• 급속히 기술력을 따라오는 중국과 기술격차를 벌려 가는 일본 사이에서 '목표지향적 기술전략' 필요
 - '핵심기술 및 신산업 창출'을 통하여 국가 성장엔진 강화
 - 기초 · 원천기술과 산업기술에 대한 전략적 투자 배분
 - '제2의 과학기술 입국'을 통해 지속적 경제성장 달성
  → 연구개발 기반 확충을 통한 지방의 균형발전과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, 신산업 창출로 경제 성장과 국가경쟁력 강화

2. 추진과제

국가 과학기술 시스템의 혁신

목표

• 세계 10위권의 과학기술 역량에 걸맞은 국가 과학기술정책 기획 · 조정

및 관리 · 지원 시스템 구축

중점과제

- 연구개발 투자 효율화를 위한 종합 조정기능 강화
- 연구성과를 높이기 위한 연구회 · 출연(연) 체제 개선
- 연구개발 지원 및 성과확산 시스템 혁신
- 지식재산 보호 · 기술이전 · 사업화 지원 강화
- 글로벌 연구개발체제 구축

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기반 강화

목표

- 연구개발 투자 확대와 기초과학 · 원천기술 육성을 통하여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
- 핵심고급인력 1만명 등 과학기술인력 양성 · 활용 촉진

중점과제

- 기초과학 육성을 통한 혁신기반 강화
- 이공계 인력 양성 · 활용촉진 및 중장기 거대과학기술 개발 추진
-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 확대

지역혁신역량 강화

목표

- 수도권 경제 · 산업 집중 완화 및 지방 성장잠재력 확충
- 지방대학을 중심으로 산 · 학 · 연 협력 연구체제 혁신

중점과제

- 지방대학을 지역혁신의 주체로 육성
- 연구개발/산업특구(R&DB) 및 지방특화 산업 육성
- 지방의 과학기술 혁신역량 강화
- 남북 과학기술협력 강화

세계 일류 IT산업 육성

목표

- 균형있는 산업구조 마련, 원천기술 확보 및 핵심인력 양성을 통하여 IT 산업의 장기적인 경쟁력 확보

중점과제

- S/W와 디지털콘텐츠 등 IT 서비스 산업 활성화
- 이동통신 등 주력 IT산업의 경쟁력 강화
- 디지털TV 관련 단말기, 시스템 및 응용 S/W를 차세대 주력 상품화

지식정보 기반으로 산업 고도화 추진

목표

- 반도체 이후의 미래 핵심기술 집중 개발
- 핵심부품 · 소재기업과 중소 · 벤처기업 육성

중점과제

- 첨단 · 원천 · 융합기술 개발을 통한 신산업 창출
- 핵심 부품 · 소재의 세계적 공급 기지화

• 중소 · 벤처기업 육성으로 역동적 산업구조 구축
• 맞춤형 산업지원정책 추진
• 공공 · 복지기술 개발을 통한 삶의 질 향상

과학문화 확산을 통한 '원칙과 신뢰'의 사회 구축

목표
• '사고의 합리화, 생활의 과학화'로 사회 전반의 시스템을 합리화

중점과제
• 국민과 함께 하는 과학문화 창달
• 과학기술 사기진작으로 이공계 기피현상 해소
• 국민이 참여하는 과학기술정책 추진

지식기반 사회에 부응한 일자리 창출

목표
• 지식기반 산업의 성장과 중소 · 벤처기업 창업 활성화를 통한 고생산성 · 고임금 신규 일자리 창출
• 우수 인적자원 개발 강화를 통한 청년층 일자리 확대
• 여성 일자리의 획기적 확대를 통한 인력 수급 고도화

중점과제
• 중소 · 벤처 창업 및 지식기반 산업 성장을 통한 신규 일자리 창출
• 신진 · 청년 · 여성 일자리 확대

미래를 열어 가는 농어촌

1. 농어촌 대책의 새로운 접근

• 앞으로 농어촌 문제는 국가경영전략 차원에서 시장지향적인 산업정책과 이를 보완하는 소득안정 정책 및 농어촌사회 정책을 병행 추진함으로써 악순환 구조를 선순환 구조로 적극 개편
  - 시장지향적인 산업정책은 고객 만족, 규모화 · 조직화, 수출 농어업을 지향
  - 소득안정 정책은 직불제 확충, 농어민의 유통가공 참여, 고품질 농업 추구
  - 농어촌사회 정책은 교육 · 복지 등 생활여건 개선, 향토산업 육성 등에 주력
• 농어업 · 농어촌 특별대책위원회의 기능 강화와 범정부적인 협조체제 구축을 통해 강력하게 추진
• 재정경제부, 과학기술부, 산업자원부, 보건복지부, 행정자치부, 교육부 등과 적극 협조

2. 주요 추진과제

공익적 기능과 시장을 지향하는 농어업

-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을 적극적으로 확충
  - 농어업 정책과 환경정책의 조화 · 통합
  - 식량(주곡)자급률 목표 설정(칼로리 기준)
  - '숲가꾸기'를 통한 산림 자원화 및 '국민의 숲' 조성
- 농어업의 시장지향성을 단계적으로 강화
  - 공공비축제 도입과 연계, 주곡정책 재정립
  - 남북 통일에 대비, 쌀생산 능력은 보유하되 생산량은 감축
  - 생산자 단체의 자율적 수급안정 역량 지원 · 확충
- 도하개발 아젠다(DDA) 협상에 우리나라 입장을 적극 반영
  - 개도국 지위 유지와 '쌀 관세화 유예'에 협상력 집중
  - EU · 일본 등 NTC그룹과 공조체제 강화
  - 농민단체 의견 수렴 등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협상 추진
- 농어업 구조조정의 연착륙 유도
  - 시장에서 선택된 우수농가를 집중지원, 전업농으로 육성
  - 경영이양 직불제를 대폭 보완, 고령농의 조기은퇴 촉진
  - 후계자 육성제도를 신규 창업농 육성방식으로 개편
- 소비자 및 수출지향의 품질경쟁력 제고
  - 모범농업 관리지침 제정 및 고품질 농수산물 생산 · 유통 강화
  - 학교 및 군 급식 확대로 우수한 '우리 농수산물'의 소비 촉진
  - 해외시장 우위 가능 품목 중심의 전략 수출상품화
- 농협 개혁과 산지유통 혁신
  - 중앙회 신경 분리 추진 등 슬림화
  - 일선조합의 합병 · 규모화로 경제사업 역량 확대
  - 품목별 연합조직 활성화 및 RPC, APC 중심 산지유통 혁신

개방화 시대의 농어업인 소득안정

- 직접지불제 확충
  - 농업의 공익적 기능 지원시스템으로서 국토경영 계약제도 검토
  - 논농업 직불제를 친환경 직불제로 개편, 친환경 축산 직불제 도입
  - 소득보전직불제, 경영이양직불제 및 어선 감척보상제 등 확충
- 부채경감 대책
  - 정책자금 금리 인하, 장기분할 상환 및 워크아웃 방식 도입
  - 정상 상환농가의 인센티브 확대 및 종합자금제 정착
  -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제도 개선 및 기금 출연 확대
- 자율적 수급조절 가격안정 및 재해보험 확대
  - 생산자 단체의 자조금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확대
  - 계약재배와 예약출하 시스템 구축으로 안정적 수급조절 도모
  - 생산자 단체와 협동조합의 자율적 유통사업 역량 강화
  -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 품목 확대 및 운영비 100% 지원
  - 보험성립이 어려운 품목의 재해지원 수준 확대
- 농어업 외 다양한 소득원 개발 확대
  - 농촌관광 활성화 등 1차+3차 산업 모델 확대 개발
  - 전통산업, 향토산업, 녹색관광과 친환경농업 연계 강화
  - 생산자, 생산자 단체의 전통식품 등 유통업 · 가공업 참여 확대

농어촌 복지증진 및 지역개발

- 농어촌형 사회안전망(safety-net) 확충
  - '농어업인 연금제도'를 강화, 농업 구조조정을 뒷받침
  - 건강보험료 경감률을 50% 수준까지 점차 확대

- 재해공제사업을 산재보험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 검토

• 농어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초복지 인프라 확충
- 농어촌 교사 인센티브 제공 등 교육환경 개선 추진
- 농어촌 보건 · 의료 서비스의 접근성과 질 개선
- 농어촌 영유아 보육, 여성 농업인 및 노인복지 강화
- 「농어촌 복지 증진 및 지역개발 특별법」 및 「농어촌 교육특별법」 제정
- 농특세 시한 연장 및 용도 조정으로 농어촌 복지 재원 충당

• 농어촌 지역개발 및 활성화
- 주민참여형 농어촌지역 발전 모델 개발, 농어촌 계획제도 검토
- 농어촌 주택 추가 취득시 양도세 면제 및 지방세 중과 배제

신 해양시대의 어업기반 구축

• 지속가능한 생산기반 확충으로 어업구조 개편
- 어업인이 자발적으로 주도하는 자율관리어업 체제의 강화
- 자원수준에 맞는 어선세력 유지 등을 통한 자원회복 도모
- 연근해 어업구조의 개편 및 원양어업 기반 강화

• 지속적인 수산자원 관리 · 조성으로 수산자원 회복
- 미래형 자원조성 방식인 바다목장 사업의 전 연안 확대
- 인공어초 사업의 조기 완료 및 종묘방류 사업의 확대
- 선진국 자원관리 방식인 총허용 어획량 제도의 정착

• 시장수요와 어장환경을 고려한 양식어업 추진
- 재해상습 해역에 대해 신규면허 제한 등 양식생산 조절
- 선어회 보급으로 양식어류 소비촉진 등 수요기반 확대
- 어장 휴식년제 도입, 친환경사료 개발 등 어장 생산성 제고

참여복지와 삶의 질 향상

참여복지와 삶의 질 향상

삶의 질 향상이 최종적인 국가 목표임에도 불구하고 세계12위의 경제규모에 비해 보건 · 복지 · 여성 · 환경 · 문화 · 교통 등 삶의 질과 관련된 분야는 상대적으로 낙후

GDP 대비 사회보장비 지출	OECD 30개국 중 29위
여성의 권한 (GEM, 2001년)	64개국 중 61위
환경지속성지수(ESI, 2002년)	142개국 중 136위
GDP 대비 문화비 지출	OECD 평균의 20% 수준

↓

우리 사회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품격있는 선진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경제뿐만 아니라 삶의 각 분야가 균형있게 발전해야 함

· 복지 · 여성 · 환경 · 문화 · 주거 분야에 대한 투자는 인적 자원의 질적 수준을 높임으로써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토대가 됨
· 국민이 주체로 참여하여 '삶의 질' 향상을 계획하고,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함
- 정책결정과 집행 · 평가 과정에 국민이 주체적으로 참여
- 지역사회, 민간자원의 공동 참여를 적극 유도
- 국가는 '국민의 만족' 을 행정의 목표로 삼는 '수요자 중심의 행정' 으로 전환하고 삶의 질에 관한 사회지표 개발과 평가체제 강화

1. 전국민을 위한 참여복지의 실현

- 노인 일자리, 연금제도, 요양체계, 평생교육 활성화 등 노인복지 차원을 넘어선 종합적인 고령사회 대책 수립
- 차상위 계층에 대해 교육 · 의료 등 부분급여를 시행하고 근로소득 공제를 확대함으로써 기초생활 보장 확대
- 사회복지 사무소 설치 등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편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사회 구현

2. 전국민 평생건강 보장체계의 실현

- 공공병원 확충 및 지역보건센터형 보건지소 설치 등 공공 보건 · 의료의 강화(2003년 10% → 2008년 30%)
- 학교보건, 산업보건 등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적극적 건강 증진사업 및 주요 질병의 국가관리체계 구축
- 건강보험제도 개선과 의료급여제도 확대, 진료비 본인 부담금 총액상한제도 시행 등으로 의료의 보장성 확대

3. 보육문제 해결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

- 보육료의 평균 50% 국가 지원, 평가인증제도 도입 등을 통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질 높은 보육환경 조성
- 방과후 보육을 방과후 아동복지 서비스로 확대 개편하는 등 종합적인 아동 보호 · 육성 체계 구축
- 시간제 육아 휴직제도 도입 등 휴직제도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모성보호와 여성의 사회참여 기반 확대

4. 지속가능한 발전과 쾌적한 환경 조성

- 전략환경평가제도 도입, 지속가능위원회 기능 강화를 통해 국가정책의 환경친화성 구현
- 저공해차 보급, 오염물질 배출 총량관리제도 도입을 통해 수도권 대기질 개선 특별대책 추진
- 에너지 부문의 환경세 도입으로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사용 유도
- 물수급 예측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수요 · 공급 정책을 연계한 물 부족 대응방안 마련

5. 문화적 가치의 확산을 통한 '질 높은 삶' 구현

- 문화영향 평가제도 도입 등을 통해 문화적 가치의 사회 전반 확산
- 지역간 · 계층간 문화격차 해소, 참여와 자치의 문화시설 운영을 통해 문화 민주주의 구현
- 체육시설 확충과 재정 · 조세 지원정책 등을 통해 생활체육을 활성화하여 국민 건강증진 도모

6. 주택가격 안정과 주거의 질 개선

- 수도권에 5년간 150만호의 주택을 건설하고 보유세를 강화하여 주택시장 불안요인 해소
- 국민임대주택 50만호 건설을 통해 저소득층 주거안정 도모
- 최저 주거기준 미달 가구에 대한 실태조사와 임대아파트 우선공급, 주거환경 정비사업 등을 통해 주거여건 개선

7. 도시 교통난 해소 및 교통 약자 보호

- 버스의 기능회복과 경전철 건설 등을 통해 도시 규모 및 특성에 맞는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
- 수도권 교통협의체를 통해 수도권 남북부 지역에 X자형 광역전철망 구축 등 교통문제 해소대책 마련
- 저상버스 도입, 지하철역 엘리베이터 설치 등을 통해 장애인 · 노약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대책 시행

국민통합과 양성평등의 구현

1. 빈부격차 완화를 통한 계층통합

- 빈부격차 문제는 사회 · 경제 각 분야에서의 불균등으로 인해 야기되므로 복합적이고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
  - 따라서 빈부격차 완화를 위해서는 다각적인 차원에서 지속적인 의지를 가지고 정책을 추진
- 유럽식의 고과세 · 고복지 모델과는 다른, 성장과 분배가 양립하는 새로운 모델을 추구
  - 토지 · 주식 · 지식자본 등 자산분배의 불평등 개선
  - 적극적 일자리 창출 노력과 고용안정의 도모
  - 조세의 형평성 제고를 통한 소득분배 개선
  - 사회안전망(Social Safety Net)의 확충과 강화
  - 지출상의 애로 요인 해소 : 특히 주택 · 교육 자금

중점 추진과제

- 부동산 보유과세의 점진적, 지속적인 현실화율 제고

• 우리사주제도 활성화를 통한 근로자 자산형성 촉진
• 노동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여성 · 노인 · 장애인 등을 위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
• 자활지원사업 활성화와 EITC 도입으로 근로를 통한 빈곤탈출 유도
• 자영자 소득파악 강화와 조세형평성 제고
• 국민연금 ·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 사각지대 해소와 부과 · 징수 업무 일원화
• 기타 빈곤층 자녀의 교육여건 개선, 중소 영세기업 근로자 복지 증진대책 발굴, 빈곤층 밀집지역에 대한 집중지원

2. 5대 차별 해소를 통한 평등사회 구현

• 우리나라의 대표적 차별로 성, 학벌, 장애인, 비정규직, 외국인 근로자 차별을 선정(5대 차별)
• 그동안 5대 차별시정의 방법으로 이용되어 온 할당제(채용목표제)는 역차별의 부작용과 함께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지원책이 뒷받침되지 못했음
• 따라서 적극적 차별시정조치(Affirmative Action : AA) 도입을 추진
 - 민간부문에서 여성, 장애인, 지방대학 졸업생을 채용할 경우 정부입찰에 우선권을 주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법
 - 성 차별, 학벌 차별, 장애인 차별이 해소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AA를 도입
• 다만, 비정규직과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AA 적용에 다소 무리가 있으므로 별도의 보호조처 강구
 - 비정규직 균등대우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여건을 구축하고 법률 제 · 개정
 - 특별법 제정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합법화
• 차별금지법 제정과 (가칭)차별시정위원회 설치
 - 5대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차별금지법을 제정
 - 차별 해소를 주요 업무로 하는 차별시정위원회 설치
  ※ (가칭)차별시정위원회 설치 방법은 전반적으로 정부조직 개편을 논의할 때 함께 결정

3. 양성 평등사회의 구현

• 그동안 여성의 대표성 제고를 위하여 여성채용 목표제, 각종 위원회의 여성참여 확대 등을 추진하였으나 대상분야가 공직부문에 제한되어 있고 정치참여 등은 저조한 실정
  ※ 여성 국회의원 비율 5.9%(181개국 중 102위)
   행정관리직 여성 비율 5%(미국 45%, 캐나다 35%)
• 호주제는 남아선호와 성비 불균형 등을 초래하여 혼인생활의 성 평등성을 저해
• 최근 인구 및 가족구성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양성평등 관점에서의 가족정책 모색 절실
• 성매매 예방, 단속 및 처벌, 피해자 보호 등 성매매 방지대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
• 여성의 대표성 제고를 위해 정치관계법에 여성 정치참여 확대 방안을 반영하고, 공공부문의 여성 채용을 확대
• 호주제 폐지를 위해서 국민적 공감대를 적극 확산하고 폐지 이후의 대안을 신중하게 검토
• 성인지적(性認知的) 가족지표 개발 및 「가족정책기본법」 제정
• 성매매 피해여성에 대한 무료 법률구조사업, 현장 상담센터 확충, 자활

지원사업 확대 등을 통하여 피해자 보호, 사회복귀 지원 종합 서비스 체계 구축

- 국무총리 산하에 성매매 방지 대책기구 설치

교육개혁과 지식문화 강국 실현

1. 참여와 자치를 통한 교육공동체 구축

• 교육혁신기구 설치

- 교육정책의 입안 · 조정 · (심사)평가 기능 등을 수행할 대통령 직속 법률기구로 상설화
- 정책 개발 · 집행 및 지원기능 중심으로 교육부 기능 개편
-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개혁을 위해 교육개혁법(가칭) 제정

• 단위학교의 참여와 자치 확대

- 교사회 · 학생회 · 학부모회의 법제화를 핵심으로 하는 학교자치 기능 강화
- 교육주체의 참여확대 및 대표성을 제고하는 방향의 교육감 · 교육위원 선출방식 개선
- 교육과정 편성 · 운영 등 단위학교의 재량 확대와 자율운영체제를 확립

• 대학운영의 민주성과 자율성 강화

- 교수회 법제화 및 교직원 · 학생 · 학부모 · 지역인사가 대학운영에 참

여할 수 있는 방향의 대학 지배구조 개편
- 학문의 자유와 대학자치 실현을 위한 기반 조성
  · 국가 수준의 학문정책 수립 및 학술진흥 기반 확충
  · 학문 후속세대 양성대책 및 비정규직 대학교수 대책 강구
- 대학비리 및 부당 해직교수에 대한 실태조사와 대책 마련

2. 공교육 내실화와 교육복지 확대

•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공교육 내실화
- 공교육과 사교육의 역할을 재정립해 나가고, 공교육 내실화와 함께 장 · 단기적인 사교육비 경감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
- 평준화 정책의 기조를 유지하는 한편, 자립형 사립고 · 특목고 · 자율학교 등에 대한 실태파악과 평가를 통해 본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는 학교정책 마련

• 학벌타파와 대학서열 완화
- 서울대 학부정원의 단계적 축소 및 대학원 중심 대학으로 집중 육성
- 국립대와 사립대간 역할분담 및 영역별 대학 특성화
- 학력차별 금지제도 도입 등 학벌중심에서 능력중심으로의 다양한 정책 강구

• 교원의 전문성 강화 및 승진제도 개선
- 적정수업시수 법제화 등 교원의 전문성 신장기반 조성
- 교원양성 · 임용체제 개선과 능력 중심의 승진제도 마련
- 초빙제 · 보직제 등 학교장 임용제도의 다양화

• 유아 및 특수아 학습권 보장과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
- 유아교육의 공교육화와 특수교육에 있어 통합기조 유지 및 특수교육 기회의 실질적 확대 추진
- 농어촌 · 도서벽지학교 지원 · 육성과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격차 해소

3. 과학기술 교육의 질적 고도화

• 초 · 중등 과학교육 강화
- 학교 교육과정에서의 과학교육 위상 강화
- 탐구 · 실험중심의 과학교육 체계 수립 및 여건 개선

• 이공계 대학교육의 질적 제고
- 지역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이공계 대학 특성화 유도
- 과학기술 발전 추세 및 산업수요에 부합토록 교육체계 개편

4. 창조적 문화역량 강화

• 문화예술 창작의 사회 핵심 자원화
- 문화예술진흥기금의 고정 재원과 기금확충 방안 마련
- 문화예술인 복지를 위한 복지금고 제도 실시

• 인권 · 교육 · 문화를 연동한 청소년 계발
- 탈학교 청소년에게 새로운 전기를 제공하는 문화 프로그램 운영
- 창의성 · 감수성 함양을 위한 문화예술 교육 확대

• 문화의 주체성과 다양성 조화
- 부산 영화제, 광주 비엔날레를 세계적 지역문화 축제로 추진
- 민족의 문화 주체성과 동질성 회복을 위한 남북 문화교류 확대

• 체험하면서 배우는 관광 활성화

•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인프라 구축과 관광상품 개발 지원
- 주5일근무제 · 휴가분산제와 연계한 '국민관광' 개발로 생활관광 정착

5. 문화적 창의성을 기반으로 문화산업 육성

- 문화콘텐츠 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 구축
  - 문화콘텐츠 생산지원을 위한 인프라 확충
  - 5천년 민족문화 전통과 창의성을 산업적으로 연계 활용
- 창의적인 전문인력 양성과 기술개발 확대
  - 예술적 창의성과 감수성을 갖춘 전문인력 공급 확대
  - IT 인프라를 기반으로 경제적 부가가치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첨단 응용기술 개발 및 보급 지원
- 문화산업 유통 합리화 및 시장구조 개선
  - 네트워크 환경에 맞는 창작자의 저작권 보호 강화
  - 문화콘텐츠 제작 · 유통 기반으로서 방송매체의 역할 강화

6. 지식정보 사회의 전면화 추진

- 혁신적인 디지털 정부 구현
  - 국민과 기업을 위한 행정 서비스의 획기적인 개선 추진
  - 편리한 e-Life 실현을 위한 대규모 정보화 사업 발굴 · 추진
- 안전한 지식정보 사회를 위해 정보보호대책 강력 추진
  - 해킹 · 바이러스 등 사이버 공격에 대비, 범국가적인 정보 보호체계 구축
  - 정부 · 기업 · 개인 등 각 부문별 정보보호 취약점 분석과 안전진단 추진
- 정보격차 해소로 소외계층의 참여복지 및 삶의 질 향상
  - 실생활과 취업 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보화 교육 중점 실시
  - 출퇴근이 어려운 주부 ·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공공부문 재택근무제도를 도입
- 초고속 정보통신망의 지속적 고도화
  - 지역적인 차별 없이 소규모 지역에서도 초고속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
  -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품질 좋은 인터넷 보급 추진

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구축

1.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노사관계 구축

• 그간의 국내외적 요구를 감안하여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노사관계제도를 개선
- 노동조합의 명칭사용 및 제한적인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 추진
- 필수공익사업의 범위를 국제노동기구(ILO) 권고, 외국 입법례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직권중재 회부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직권중재제도 개선

2. 중층적 구조의 사회적 파트너십 형성

• 원칙과 신뢰, 대화와 타협의 기조하에 중층적 협의 · 교섭구조를 확산시킴
- 의사결정 단계의 간소화 등 운영 시스템을 개선하고, 합의사항 이행구조를 정립하는 등 노사정위원회 운영 내실화
- 지역별 · 업종별 · 산업별 노사정협의회를 활성화하는 등 중위적 수준의 사회적 협의체제 구축
- 기업별 교섭을 전제한 노동관계법을 정비하고, 여건이 마련된 공공 · 민간 부문부터 업종별 · 산업별 교섭을 점차적으로 유도하여 중층적 교섭구조를 점진적으로 확산

3. 자율과 책임의 노사 자치주의 확립

• 노사 자치주의를 원칙적인 관점에서 일관되게 추진
- 노사분규에 대한 공권력 개입을 최소화하고 노사분규 관련 법 위반자에 대한 불구속 수사관행 확립
- 평화적 쟁의행위에 대한 업무방해죄 적용을 신중히 하고, 노동사건에 대한 손해배상 · 가압류 청구의 남용을 방지하는 방안 강구
- 공공부문 구조조정 과정에 노동자들의 참여 방안을 마련하고, 공기업 등 공공부문의 자율 · 책임 경영체제를 확립하는 등 정부가 모범을 보이는 공공부문의 노사관계 실현(노동위원회에 '공공부문특별조정위원회' 설치 검토)

4. 근로생활의 질 향상

• 노동시장 내의 상대적 빈곤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여 잠재적 성장력을 견인하고 삶의 질을 높임
- 국회 계류중인 주5일제 법안이 조기에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, 노동시간 단축 및 일과 여가가 조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
- 노동보험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보험수급률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임
※ 특수 고용종사자 등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, 장기 실업자에 대한 실

업급여 지급 등

- 퇴직금제도를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여 노후소득 보장기능 강화(노사합의로 선택케 함)

※ 퇴직금과 동일한 가치를 갖고 사업장 이동시 통산(通算)할 수 있는 퇴직 연금제도 설계

5. 노동행정 서비스의 역량 확충

• 전통적 노동문제의 증가와 함께 비정규직, 외국인 근로자 보호 등 새로운 노동행정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노동행정 역량의 확충이 시급함

- 노동위원회의 조직 · 인력 확충으로 공적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사적 조정기능의 활성화로 공적 조정의 한계를 보완함(사적 조정 전문인력 Pool 구성 · 관리)
- 근로감독관을 증원하고, 전문성을 보강하는 등 근로감독 행정을 강화
- 노동정책 과정에 노사단체 및 공익인사의 실질적 참여를 확대하는 등 노동행정에의 민간 참여를 확대

6.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

• 지식기반 산업의 성장과 중소 · 벤처기업 창업 활성화를 통한 고생산성 · 고임금의 신규 일자리 창출

- 중소 · 벤처기업 창업 활성화 기반 구축
- 산업혁신에 따른 청년층 일자리 창출 강화
- 과학기술 혁신에 따른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

• 노동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여성 · 노인 ·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보건 · 복지 · 환경 · 교육 등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를 매년 5만~10만개 창출

• 실업 없는 직장이동을 위한 효율적 노동시장 정보 시스템 구축

- 고용정보 관리 · 운영기능 및 공공 · 민간 직업안정기관 지원 · 평가 시스템 보강

• 고용안정센터를 중심으로 취업알선, 고용보험, 직업훈련, 자활사업 등 원-스톱(one-stop) 서비스를 활성화하고, 직업상담원을 단계적으로 정규직화하여 고용안정 서비스의 질 제고

• 학교교육과 평생교육을 가이드할 수 있도록 국가자격제도를 혁신